

안철수 '진보적 자유주의' 공식화... 새확장 시동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심포지엄서 제시

사회 양극화·불평등 개선 '대안 정당' 필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자신의 정치적 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식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장집 '내일' 이사장의 정치분야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공간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내놓은 발제문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한국정치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현재 한국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와 반민주, 냉전 수구세력과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 향유의 평등한 권리에 바탕해 정부와 법의 영역을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에 바탕한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진보적'의 의미에 대해선 "신자유주의

의 시장근본주의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비판적으로 보고 이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주제로 '대안 정당'을 제시하며 안 의원의 독자세력

화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새로운 대안 정당뿐 아니라 기존 민주당도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경제 분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진보적 경제질서 모색'이라는 주제로, 복지 분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내일"을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내일'이 추구할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우선 "내일"이 주축하는

세미나는 서울에서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 채워 확장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둘째, 다양한 민생의 현상으로 들어가겠다"며 "현장에서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들을 직접 듣고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로 이해하는 삶과 가슴으로 느끼는 삶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체험이 스승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곳곳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 채워 확장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세 번째로 이 같은 현장을 바탕으로 정책과 비전을 현실화·구체화하겠다고 "법안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광뉴스

安 '진보적 자유주의' 야권 술렁

민주 '야권의 오래된 화두'... 주도권 경쟁 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9일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안 의원의 '특허물'이 아닌 야권에 오래된 화두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주도권을 안 의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일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진보적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새누리당처럼 보수적인 분들이 일부 있지만, 다수는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손학규 전 대표가 이미 지난 2000년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적도 있음을 강조한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자기 발견된 것은 아니고 낫익은 기지"라면서도 "진보적 자유주의가 진보정의당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진보의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 구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야권의 포괄적인 가치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나 오는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을 한 울타리로 묶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광뉴스

정청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돈봉투 줬다"

서 의원 "사실무근"

국회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출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사건으로 정보위 개혁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지난 3월 (서 위원장이) 제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외 출장을 잘 다녀오라며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똥만 고맙게 받겠

다'고 하고 돌려보냈다"면서 "얼마가 있는지 확인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그런 말을 하니 박 원내대표가 '공개해 버리지 뭐, 그렇게 암전히 돌려주느냐'고 했다"면서 "그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면서 "저를 고소 안 하면 뇌물공여,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서 위원장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서울 국제도서전서

박대통령이 고른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 모두 5권의 책을 구입했다.

박 대통령은 인문교양서적 출판사인 도서출판 책세상 부스에서 '정조와 홍대용, 생각을 겨루다'(김도환), '이방인 일러스트 관화집'(알베르 까뮈), '유럽의 교육'(로맹 가리), '철학과 마음의 치유'(김정현), '답성호원'(윤곡 이이)과 우계 성흔이 주고받은 서신을 모은 책)을 구입했다. 계산은 도서상품권으로 했다. /박지경기자jpark@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새국면

與 "국조 합의 국회법 위반" 주장에 野 "합의 뒤집기냐" 성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새누리당의 합의 뒤집기 시도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있어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을 양당이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또한 조기에 매듭지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수사 종료 후 국조 실시를 주장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국조 폐기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표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 당시에) 국회법이나 국정조사법 같은 경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양쪽이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졸속 합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 후에도 여야 간에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내

대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

"100%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원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맞불 작전도 펼쳤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원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즉각적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

쟁까지 거론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을 소집, 새누리당이 지난 3월 이뤄진 국조 합의를 뒤집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하도 물타기를 많이 해서 이리다가 국회가 침수될지도 모르겠다"며 "합의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합의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기춘 사무총장은 합의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새누리당 일부의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당시 합의문 작성 전에 국회사무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재판 중이나 검찰 조사 중에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3월 새누리당 이한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완료 후 즉각 국조 실시'에 합의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국회 교문위 "신문산업 국가 지원" 한목소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신학용 의원)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문산업진흥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공공재 성격의 신문산업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가가치세 할인 및 면제 등의 세제 지원과 관련, 해외사세를 감안할 때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신문진흥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신문진흥특별법'은 지난

해 10월 발의돼, 지난 17일 교문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신문산업진흥위원회·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신문 공동제작·신문읽기·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신문진흥 사업을 담고 있다.

또 한시적으로 정부광고대행수수료를 감면하고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본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인 신문진흥 방안을 포함해 있다. 침체에 빠진 신문산업을 활성화해 여론다양성·미디어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